

논 단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입지선정

候補地域 住民意識과 解決方案의 모색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최대 현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이다. 과학기술처와 원자력연구소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90년 말까지 150만평의 부지를 확정하여 93년 6월까지 부지매입과 특성조사 및 부지조성을 끝내고, 7월부터 건설에 들어가 95년 말까지는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97년 말까지 사용후연료의 중간시설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된 원자력 바로알기 캠페인



전 광 회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정부 당국은 이처럼 긴급한 대책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을 3년 이상 지연시킴으로 해서 실천의지에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제 30년만에 처음으로 이 땅에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확고부동한 결단을 내려야 할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문민정부에 거는 기대

현재 각분야에서 새롭게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는 문민정부 아래에서 폐기물 관리시설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문제는 흔히들 인간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차칫 잘못하면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권위주의적 통치기간인 제6공화국에서 발생하였던 89년의 경북 영일과 90년 충남 안면도, 그 후 서울대에서 폐기물 관리시설의 6개 후보지역을 선정하였을 때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집단민원에서 보았듯이, 지역주민의 생존권 차원의 저항운동은 더욱 격심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국민전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환경차원에서 다른 영역의 사회운동과 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역의 주민의식은 물론 국민전체의 의식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원자력 관련 언론 보도에서 제1의 표적이 되었던 안면도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하면서, 원자력문제를 둘러싼 찬반의견과 그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오늘날 국민의 온갖 기대와 함께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예전처럼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을 지양하고 전체 국민의 합의에 바탕을 둔 폐기물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 글에서 원전산업의 운명이 걸려있는 폐기물 관리시설의 장래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이해를 위한 전체 조건과 접근방안 그리고 정부 및 사업자측의 주민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같은 준비작업은 강력한 국가 의지와 체계적인 홍보정책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요즘처럼 사회 각 부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기에,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대단히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안면도 집단민원을 회고하며

원자력문제, 특히 폐기물 관리시설에 관심이 약간이라도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90년 11월 안면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한겨레신문은 당시 반핵·반원전의 선봉적인 언론매체로서 지역사회의 「알 권리」라는 명분과 함께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핵폐기물 연구처분장」이라는 표제가 달린 「95년 완

공, 부지 1백여만평 이미 확보, 올해 안 보관장·연구소 지을 방침」(1990년 11월 3일)이라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우리는 90년 안면도의 집단민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선행사건이 서산 천수만 일대의 대단위 간척사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학기술처와 원자력연구소가 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을 때, 안면도 주민에게는 현대건설에 의한 천수만 간척사업의 피해가 지을 수 없는 악몽으로 작용하였다.

정부 당국은 91년 안면도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계획을 취소하였으며, 그 결정은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과학기술처와 원자력연구소의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91년도 서울대 국민 의식조사는 방사성폐기물처분 연구시설 부지로써 안면도를 재고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였다. 약 75%정도의 응답자가 안면도도 다른 지역과 똑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정부당국이나 사업자측은 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확보에는 분명히 지질학적 입지조건을 고려하면서 지역주민을 신중하게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야 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안면도 주민의식 조사결과

안면도 집단민원의 원인을 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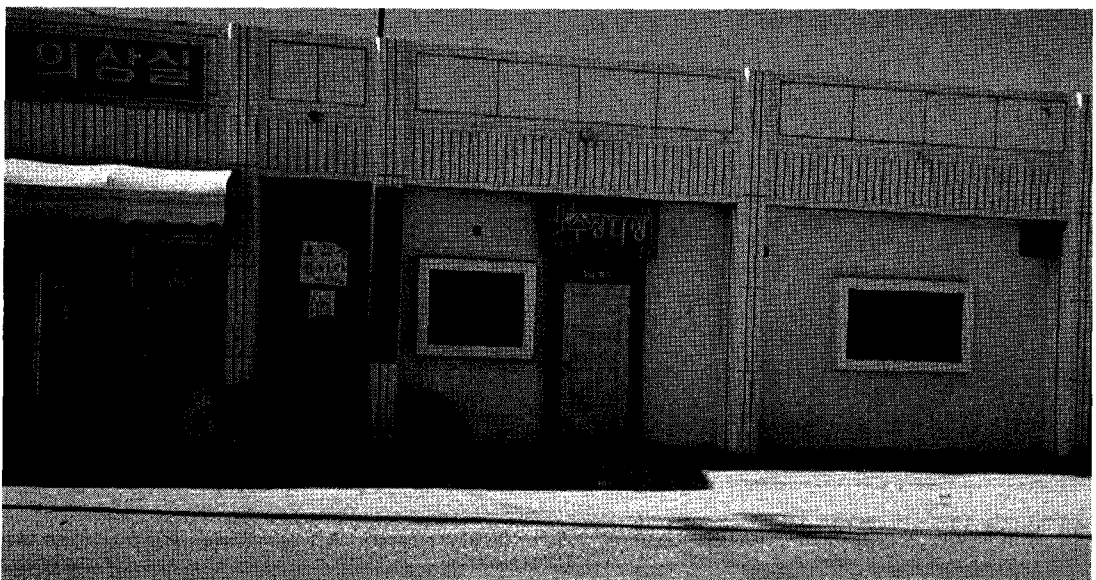
색하기 위하여 우리는 안면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안면도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을 1985년 인구 및 주택 총 조사의 내용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였으며, 조사대상 지역은 안면읍(인구: 13, 500명)의 승언리가 안면도 사태의 핵심이 되는 시장지역이며, 고남면(인구: 500명)의 폐기물처분시설 건설예정 지역인 구메·젓개 마을과 그 이웃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안면읍 「주민대표」들의 결사적인 반대 때문에 설문조사가 목표 표본의 반 정도 밖에 채우지 못한 채 제대로 끝까지 수행되지 못한 것인 만큼, 조사 결과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함은 여러 차례 다른 곳에서도 강조되었다.

안면도 집단민원에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자기평가는 인근지역인 안면읍과 후보지역인 고남면 주민들 사이에 약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안면읍 응답자 중에서 반대시위의 동기는 물론 행동도 당연했다고 본 경우가 약 2/3 (63%), 동기는 당연했지만 행동은 조금 지나쳤다고 본 경우가 28%였다. 한편 고남면 응답자 중에서 동기는 물론 행동도 당연했다고 본 경우가 약 40%, 동기는 당연했지만 행동은 지나쳤다고 본 경우가 46%였다. 이 결과는 간접적이거나 안면읍 주민, 특히 승언리 주민들이 반핵시위의 핵심을 이루고 고남면 사람들은 그들의 조연을 담당했다는 일부 고남면 응답자들의 주장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당시 자신들의 집단민원의 일차적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안면읍과 고남면 응답자들은 안면도 주민운동이 발생하게 된 일차적 원인으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점과 (30%, 25%),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24%, 34%)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으나, 그들 사이에 방사성폐기물의 실체를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안면읍 응답자들은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과 피와 오염 등의 환경문제(23%)를, 고남면 응답자들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이해부족(34%) 안면도 주민운동의 일차적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경북 영일군의 유치 찬성자 영업소에 붉은 페인트로 비난한 글을 써 놓았다.



안면도의 집단민원이 당시 제6공화국에서 국민전체의 과격화 성향 때문이나 생업여건의 악화나 지역발전의 저해 때문에 일어났다고는 생각하는 응답자는 오히려 적었다는 것이다.

원전과 폐기물 관리시설에 관한 반대여론은 시설입지 지역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안면도의 집단민원을 회고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사업보다 토지수용지역의 개별가구에 대한 물질적 보상에 관심을 보였다든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안면읍 주민들은 그 금전적 보상이 건물·가옥·토지 등에 대하여, 해미 군용비행장 건설과정의 토지수용에 적용되었던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안면도에 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총 1조 2천억~2조원의 엄청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며, 지역주민이 유치결정을 내리는 경우 보상요구는 지금도 그 수준을 밑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대규모 개발계획에서 일상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앞으로의 국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정부 당국인 과학기술처와 원자력연구소가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처분 영구시설 건

설계획에 대하여 거의 또는 결코 타협될 수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안면읍 주민들의 경우에는 50%를 약간 넘었고, 고남면 주민들의 경우에는 5%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은 겉으로는 지역주민들, 특히 안면읍 주민들이 안면도 방사성폐기물처분 영구시설 건설계획에 대단히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이나 사업자 측인 원자력연구소가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 지역주민들과의 타협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는 우리가 안면읍사무소에서 「주민대표」들과 설문조사의 목적을 두고 대화하는 도중 구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주민 한 사람은 자신을 부르지 않고 대화가 진행된 데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의 입장은 원자력 관련시설을 견학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후, 지역주민에 대한 만족스러운 개별적인 물질적·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폐기물 관리시설의 유치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물론, 우리는 안면도지역의 집단민원 사례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소극적 지지(Negative Support) 성향을 가진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력의 찬반논쟁

우리는 허벨레 William Herberle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지금 「원자력 논쟁은 사회 밑바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곧 원자력문제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도 순수한 과학이나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화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원자력발전소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폐기물 관리계획은 이제 단순한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정치문제가 되어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면도는 물론 세계 각국의 모든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찬반의견은 (특히 미국의 TMI 원전사고와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래), 원전 논쟁과 같은 궤도를 그리고 있다. 원자력의 필요성, 유용성, 안전성, 경제성, 또는 생물·환경에의 충격, 핵테러리즘의 위협 등에 관한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나라들에서 몇년 동안에 걸쳐 두드러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쟁에서 몇 가지의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장소와 문화의 차이와 관계없이 공통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공통의 유형이 현재의 이른 바 원자력논쟁의 보편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원자력 지지자들의 입장

우선 이 글에서 최초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논쟁의 당사자들은 명백히 양분화되어 대척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1의 집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원자력 지지자들」이다. 이 집단에는 원자력정책의 추진 모체인 정부 당국, 원자력발전의 당사자인 전력회사(한국전력)와 원전관련시설·설비의 제작업체들로 이루어진 광의의 「원자력산업」, 원자력기술의 개발을 직업으로 하는 다수의 과학자, 기술자집단, 그리고 직접 원자력산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 강한 위험감과 우려를 느끼는 정치가, 관료, 경제·산업인, 학자, 지식인, 언론인 등과 「말없는 다수」의 민중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지자들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현실주의적 시각

세계의 에너지 정세를 살펴보면 화석연료의 매장량은 유한하고 따라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써는 이미 가동 중인 원자력이 가장 유망하다. 태양열, 지열 등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것의 상업화는 아직도 요원하여 지금은 두말없이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로부터 가까운 미래의 중시

50~100년 후, 또는 인류의 영원한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로써의 급선무는 당장 발생하고 있고 당면하고 있는 현실인 에너지문제를 황당무계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 스스로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장래의 문제에 너무나 집착하여, 현재의 원자력을 무시하는 것은 문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위험 대 이익의 사고

인간이 행하는 것, 또는 인간이 생산하는 것에는 모두 플러스(+)의 측면과 마이너스(-)의 측면이 있다. 원자력에도 플러스의 측면과 마이너스의 측면이 있지만, 필요한 것은 플러스의 측면을 강화하고 마이너스의 측면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현가능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원자력의 마이너스 측면이 제로(0)가 아니라고 하여 원자력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원자력의 마이너스 측면을 강조하고, 원자력의 플러스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다. 원자력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 이상, 원자력의 마이너스 측면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다른 종류의 기술혁신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에 있어서도 위험 대 이익의 고려에 기초한 현실적인 절충 또는 타협

이 필요할 것이다.

물질주의에의 경도

과학기술의 세계에는 그것에 고유한 물질주의적 발상이 있다. 그 예로써는 사물의 좋고 나쁨을 직관적으로 「전무」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초한 위험의 확률에서 상대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접근방법이 있다. 이 관점에 서면, 원자력발전에 관한 사고나 재앙의 확률이 완전히 제로라고 가정하거나, 또는 그 같은 확률을 완전히 제로로 한다고 하는 주장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또한 명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나 재앙의 발생에 의한 사망확률이 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비행기 사고나 자동차 사고의 결과에 따른 사망확률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원자력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원자력 지지자들에 의한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주장은 이 같은 확률론적인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바가 많다.

민족주의적 신념

마지막으로, 원전 지지자들의 주장에는 단순히 원자력산업의 기득권 수호라는 측면 외에도 국가적 입장에서 서 있다. 예컨대, 「에너지의 안정공급」이나 「경제적 안전보장」 등에서 보는 것처럼, 국권수호에 대한 민족주의적

신념이 있다.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지지자들」 사이에는 (특히 1973~74년 석유위기 이래) 국제환경의 불안 정성과 불확실성에 의하여 방해 받지 않는 안정된 에너지구조를 국내적으로 정비할 필요를 통감 하기에 이르렀다. 산유국 멕시코 를 포함한 많은 발전도상국에서도 한편으로 탈 석유시대의 도래 를 대비하여, 다른 한편으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여 원자력의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해외종속에서 자유로운 에너지 공급을 추구하고 민족자위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반대자들의 시각

제2의 집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원자력 반대자들」이다. 반대자들의 경우에도, 그 동기나 운동형태는 대단히 다르고 반드시 통일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며, 나라에 따라 상당히 사정이 다른 점도 있다. 이를 대별하여 보면 ① 과학자 집단 ② 집단단원 또는 주민운동 ③ 조직 노동자에 의한 반대운동 ④ 과격 테러리즘 집단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반대자의 주장에는 상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주의적 시각

「지지자들」에게 있어서의 현실주의적 시각을 대척적으로 반대자의 논거로 조망해 본다면 현재의 에너지문제에 대한 중시의 정도가 대단히 낮다. 전자가 현재 당면하는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타개 하는가 하는 현실적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하여, 후자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미래의 선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점 후자는 고도로 이상주의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후자가 아직 실용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은 태양열·지열의 이용에 대하여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될 수 없다.

먼 미래의 중시

현재의 환경파괴 주범은 급격한 산업화의 파도를 탄 근대사회가 장래의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제한의 산업화를 추구한 무책임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원자력에 대해서도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전 인류의 먼 미래에 생존할 일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이 횡행하고 있다.

이처럼 폐쇄된 「우주 지구호」에 원자로와 원자연료 주기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독한 방사선물질, 특히 플루토늄이 점점 축적된다면, 이 지구는 곧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들은 먼 미래의 자손의

운명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를 수호하기 위하여 원자력은 폐기되지 않으면 안된다.

방사능에 대한 일면적 진리

방사선 내지 방사능이 건강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핵·반원전집단의 주장에는 「원자력발전과 방사능오염은 불가분 또는 불가피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역으로 반대자의 주장에는 자연방사선과 보건의료목적의 방사선 이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방사능오염에 대한 불안은 결코 반핵·반원전집단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사능오염에 대한 「반대자」의 인식은 「일면적 진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정신주의적 입장

원전반대자들의 주장에는 고도 물질주의의 문명, 관리사회, 거대국가, 거대산업 등 현대문명의 물질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강한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원전반대자들의 주장에는 「인류의 미래」, 「자손의 번영」, 「불안에서 자유로운 사회」 등 철학적 내지 정신적 가치의 추구에 중점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점, 지지자들의 접근방법이 물질주의적 합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들의 입장은 대척적으로 정신주의적 관념론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토피아적 신념

원자력 지지자들의 주장이 흔히들 「우리나라」라는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예컨대, 에너지자립 또는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반대자들의 관심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와 같은 표현이 대단히 빈번하게 반핵·반원전집단의 주장에서 발견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의견과 입장의 변경 가능성

현재 우리 사회는 탈 냉전시대로 이념은 보수화 되고 있다. 특히 앞에서 본 대척적 입장에 있는 원자력 지지자와 반대자의 구분은 원전과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역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각 진영 안에 있어서도 소수의 이른바 「투사」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엄격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특정 입장을 준수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소수의 지역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논쟁」은 말 그대로 「논쟁」이고, 그 한도 안에서 「논쟁」은 「개종」 곧 설득에 의한 의견과 입장의 변경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 한도 안에서 원자력 논쟁은 2개의 상반되는 신념과 가치관의 사이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일종의 「종교전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종교전쟁을 「더 많은 사람의 심정에 강하게, 그리고 깊숙하게 호소하는 데 성공하는 측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심정에 호소한다」는 것은 형식논리나 기타 모든 유형의 과학적 합리주의, 또는 물질주의적 문명론만으로는 반드시 가능한 결론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논쟁」이란 사고와 추론의 전달방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만약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바로 그것이다」, 「과연 그렇구나」 등의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논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필경, 논쟁에서 사용되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장점을 이해시켜 납득하게 하는 수사학적 수단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같은 개종에의 투쟁은 국경과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서 횡단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 유념해야 한다. 원전과 폐기물 관리시설을 둘러싼 원자력논쟁은 우리나라에서나 일본·

미국·프랑스·독일·스웨덴 등에서도 일어났으며, 점점 그 논쟁의 치열함은 정도를 더해 가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자력 논쟁은 개별사회에 있어서 각종의 계층을 횡단하고 있으며, 각종의 계층 안에서 논쟁은 생겨나고 있다. 「원자력을 추진해야 하는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쟁은 과학자, 기술관료, 기업가, 경제학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남녀노소의 일반시민 모두를 완전히 양분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지역주민 이해의 전제조건들

우리는 원자력의 찬반논쟁이 「종교전쟁」의 성격을 지닌 이상 지역주민과 정책 당국간에 신뢰를 구축하지 않으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성공적인 해결방안은 더 이상 모색될 수 없다고 믿는다. 서울대에서 91년에 행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원전시설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강한 불신과 위험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관리를 신뢰하는 응답자는 3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를 신뢰하는 비율이 40%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신뢰성의 회복

신뢰관계란 상호성(Reciprocal-

ity)에 근거를 두고 있어 서로 생활환경이나 생활습관이 다른 지역주민과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쌍방간에 신뢰성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서는 원자력사업이 대단히 곤란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의 첫 번째 조건은 오늘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한전의 의혹」도 없는 의견의 제시이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찬반양론, 지지와 반대가 있는 만큼, 당사자의 정직성에 근간을 두고 접근하는 상호작용이 상호간의 이해를 북돋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상호 신뢰의 구축 없이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을 원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야 한다. 그러한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일방의 무조건 승복이나 노예적 굴복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바른 정보의 제공

우리는 원전산업의 최대 현안인 폐기물 관리사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역주민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밀실행정」을 일삼았던 정부 당국의 도덕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 마디로, 과거의 행정부가 청정에너지를 찾기 전에 청정권력(淸淨權力)을 행사했어야 마땅하다. 한국 현

대에서 30여년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문민정부는 도덕성이 강한 정부로써 과거의 박정희정권이나 제5공화국이나 제6공화국의 권위주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재 사회운동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불만이나 조직적인 자원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에 대처하는 문민정부의 공정한 논리나 접근방식이 이 보다 훨씬 우월하면 집단민원에 바탕을 둔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이 그들 나름대로의 「도덕성」이나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여 성공을 거두는 것은 엄격히 말하여 불가능하다.

원전관련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정당성」이 결여된 국가권력과 이에 부속된 관계 당국의 불공정한 대응방법이다. 많은 경우에 도지사나 군수는 현지 주민에게 원전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행정비밀주의나 임시 방편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이 과거 집단민원을 가져오는 원인이었다. 특히, 이 같은 「잘못된」 생각들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군사문화의 소산으로 「지명-홍보(Designation-Advertisement)」의 전략이든 공개모집에 의한 부지선정이든 제6공화국의 형식적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전국의 투기장화」나 「전 국민의 투기꾼화」를 회고 할 때, 국민정신의 부후화(腐朽化)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별로 유용한 방법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권위-법과 질서의 확립

다음으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폐기물 관리사업의 해결방안은 지방행정관청의 통제력 약화를 반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중앙정부의 권위상실이며, 국가기강의 이완(弛緩)에 기인하는 것으로 권위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권위로써 「법과 질서」의 확립이 필수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5공화국은 물론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사회통제, 좀더 쉽게 「체제안보」의 전반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검찰·경찰 나아가 안전기획부까지도 지역사회의 집단민원조직에 대한 규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은 정부 당국의 원자력정책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정에 어두운 중앙정부(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나 연구기관(원자력연구소)이 현지주민들과 직접 무력·폭력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과학기술처와 원자력연구소나 상공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원전사업 주체가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운동단체와 맞대결을 하게 될 때, 「국민적 합의」라는 이름에 바탕을 둔 해결점의 모색은 점점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의 투명성과 일관성

앞으로 우리는 지역주민의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문민정부는 「강권적 권위주의」 개념이 아니라 민중의 강력한 의지와 정당성 있는 권력, 곧 「권위」의 개념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개인이나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지역이익으로 과대포장하여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과 이기주의를 확대심화하는 폐단은 적극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수립으로 각계 각층의 정치 지망생들은 각 군과 각 면에서 설치된 반핵·반원전 운동단체에 참여하여, 주민의 표들을 얻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앞으로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정치권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과 먼저 접촉을 하고 국가의 「경제적 안보」는 물론 「군사적 안보」라는 차원에서 반핵·반원전의 논리에 대한 방어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92년 3월 24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전이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후보지의 현역 여당의 원이 낙선하고, 스스로 「핵박사」라고 칭하는 전혀 엉뚱한 인물이 당선되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여당의 국회의원도 갑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핵, 반원전의 논리를 활용하여

당선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원전 관련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반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설득력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으로 원전사업의 최대 현안인 폐기물 관리사업의 성공적인 해결방안은 모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곧, 무엇보다도 30년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문민정권의 시대에 있어서 고위 결정자들이 북한의 핵개발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때에 스스로 원자력문제 전문가가 되는 일은 국가경영의 「기본과목」 중의 「기본과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인도의 네루, 프랑스의 드골, 일본의 나카소네가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원자력문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핵원칙을 준수하면서 궁극적으로 「군사목적의 원자력」인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 것이고, 「세계 핵불확산체제」라는 차별적 핵개발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원자력정책이 필요없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원자력정책이 궁극적으로 결정된다면, 그것은 반핵·평화운동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주권상실」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차별적 규제가 만들어 놓은 「군사목적의 원자력」에 대한 규제는 확실히 준수하고, 우리의 사회, 경제와 국력증대에 도움이 되는 한 「금지사항」이 외의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야겠다는 정치 지도자의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물론 우리나라 농축이나 사후연료 재처리를 언급할수록 강대국의 경제심을 유발하여 결국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약소국」의 논리만은 확실하게 근절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이런 논리를 믿고 있는 한 강대국의 불필요한 요구마저 뿌리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풀려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이제 확실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발생한 「반핵평화운동」을 한반도의 상황에 필요하고 적합한 새로운 「반핵평화운동」으로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민주화, 반외세, 자주·민족통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핵평화운동을 넘어서, 원자력문제에 대한 새로운 반성과 성찰태도를 키워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접근을 생각하며

우리는 폐기물사업 후보지역의 주민접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기관(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과 관련단체(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의 원전사업이 행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함께 공개주의 원칙을 확립하도록 권고하고 싶다.

불신의 벽을 허물자

현재에도 불신의 벽을 허물기는 대단히 힘들다. 원자력문제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원전사업, 특히 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추진 세력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원자력정책에 대한 공개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안심시켜야 한다.

따라서 부지 조사활동,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시설 등 사업진행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구구한 억측을 방지하고 원전 관련시설 추진세력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말썽이나 사고가 난 원전 관련시설에 대하여 언론에 자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원자력발전에 관한 이야기는 「군사비밀」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원자력은쟁이 「종교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듯이, 후보 지역의 주민들과 접근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지자(Positive Support)와 소극적 지지자(Negative Support)를 구분하여 시설 추진세력의 입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이 대체로 두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하나는 질병이고 또 하나는 사고이다. 소극적 지지자의 경우에는 「핵 알레르기」나 「원전반대운동」에 필적하는 「자동차 알레르기」나 「자동차반대운동」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원자력의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자력 추진세력의 입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개청문회를 활성화 하자

오늘날 대규모 시설의 건설과정에서 후보지역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으로서 공개청문회의 개최는 대단히 중요한 절차이다. 원자력관련시설을 건설할 때, 현지주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공개 청문회의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행정간담회」의 의견을 좇아 1980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공개토론회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통산성이 전원개발조정심의회에 자문하기 전에 통산성에 의한 안전심사가 끝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중점검을 하고, 이 때에 제2차 공개토론회가 개최된다. 1992년 10월 말까지 모두 10여차례의 제1차 공개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총 20회의 공개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최근에는 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신에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곧, 원자력발전소 등의 입지가 주변주민들에게 수락되어지는 것

을 우리는 국민이해, 곧, 국민대중이 원자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뢰성은 획득, 불안감은 해소

우리는 원자력시설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획득하고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야 한다(안전성과 과학성에 대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지금까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여 왔다. 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면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원전반대세력을 중립화하고, 시설유치세력의 위상을 높이고 노력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모범적 시설들을 소개해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를 도입하여,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원자력 추진세력들에게 도덕적 지원(이것은 금전적 지원 또는 시장전략에 의한 태도변용보다 더 중요하다)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그룹 상주요원을 파견하자

우리는 현지 주민들의 일시적인 반대가 있더라도, 정부당국이나 사업자측은 방사성폐기물 부지 예정지나 확정지에 상주요원

을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실제로 정부 당국의 정책입안자나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사회학·심리학·지리학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상주요원을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원자력 시설에 대한 홍보나 주민의 민원 사항을 수집하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후보지역 안에서 부락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컴퓨터회사요 다국적기업인 IBM이 자신들의 이윤 추구적인 상업활동에 투자하는 연간 예산에 비하여 자회사에 위치하는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제고하는 문화사회활동에 투자하는 연간 예산이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님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회를 상설하자

우리는 원자력산업을 진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위원회는 지역주민대표는 물론 보건당국, 환경보호주의자 등으로 구성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과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한 의문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직접 시설을 보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지역위원회로 하여금 매주 소식지(News Letter)를 발간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같은 지역위원회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와 공동으로 원자력 관련 제반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안면도문제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는 이 글을 끝맺기 전에 안면도지역의 집단민원에 관한 연구를 종결한지 1년이 지난 후에, 한 청년의 금전적 사정과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가 「양심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한 데 대하여 당혹감을 금하지 못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93년 1월 18일 안면도의 한 청년은 양심선언문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발표하였다. 우리는 지난 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시도한 「전국연합」의 구성단체인 「공해추방운동연합」의 강력한 지원 없이는 원자력문제의 성격이 상황에 따라 왜곡되지 않으리라고 단정한다. 오늘날 이렇게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켜 본

인의 뜻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리고 반핵운동가의 필요에 따라, 「양심선언」이라는 이름으로 각색과 연출을 해서 반핵운동단체에게 「재 논에 물대기」식의 결론만을 이끌어 낸다면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는 정치화되어 적정해법을 찾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의견으로는, 원자력 연구소는 그야말로 첨단과학인 「원자력」의 평화이용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곳으로 현대과학이 보증하는 바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폐기물처분장의 입지 여건과 부지선정에 대하여 연구를 해야 하는 것, 그 이상의 책임을 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본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소의 상급관청인 과학기술처도 행정부의 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등부처로서 원자력관련 행정과 부지확보에 필요한 능력을 완전히 상실당한 채 있음을 문민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은 유념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9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득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이었다. 사실, 93년 1월 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 절차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전임정권이 처리해야 한다는니, 새로운 문민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니 하며 티격

태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모습은 한국 사회과학 역사에서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것으로 대학교수가 국가정책 사업 관련 연구용역에 참여한 「폐섬 죄」로 부지후보지역의 주민들에 의하여 화형식을 당해야 했다는 저간의 사정을 생각할 때 정말로 고통스러운 느낌을 없애기 힘들었다고 하겠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경제적 안보」나 「군사적 안보」나 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하겠으며, 국민들이 진실로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나서겠는가를 현 문민정부의 정책당국자는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91년 안면도지역에서 과학기술처와 원자력연구소의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연구를 종결한 이 후, 각종 환경운동단체나 반핵운동단체로부터 그들의 반핵평화운동사업에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자력의 방사능·방사성물질들이 잘못 다루어져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과 그들의 과학문명의 손익(損益)에 대한 용의주도한 사고에는 충분히 공감되는 점이 있다. 그리고 특히 「민주화」와 「반독재」 투쟁의 과정에서 과거 권위주의체제에 저항했던 그들의 순수한 열정에 대해서는 엄청난

존경심을 표하고 싶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앞에 놓여진 과제인 원자력문제와 폐기물 관리시설은 바로 우리의 생존에 관한 당면한 현실문제로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제2의 안면도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운동단체나 반핵운동단체는 항상 미국의 드리마일 아일랜드, 체르노빌원전사고 문제에 대하여 열심히 역흥보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흑백논리에 입각하여 에너지문제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관념적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을 전쟁기술의 연장이라고만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글을 쓰는 우리는 그들에게 그토록 자신들의 이념적 사고의 원천이 되었던 옛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파국(체르노빌 원전사고보다도 더 무서운 파국적 사고)을 심사숙고하고 심모원려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것도 부족하면 반핵운동단체들이 평화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의 결정체라고 간주했던 반핵평화운동, 바로 그것의 이념적 원인 제공자인 북한이 누구이며, 그들이 「핵의 군사이용」, 곧 핵무기 개발에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제 반핵운동단체는

물론 우리나라의 여당과 제1야당인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이 원자력문제, 특히 폐기물 관리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남용하여, 또 하나의 「양심선언」이나 제2의 안면도 집단민원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우리는 양심선언과 원전관련 집단민원의 경제적·도덕적 지원단체인 반핵운동단체들에게 묻고 싶다.

남한의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은 엄청난 환경파멸을 가져오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지역주민들에게 그들의 신념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언론매체에 「양심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보도하게끔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꿀먹은 방어리」 모양으로 그렇게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그들 자신도 잘 모르는 듯하다.

우리는 그들이 사회와 민족과 인류와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좀더 할만한 「보람있는」 대 사업을 찾아서 환경보호운동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면, 특정 지역주민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 「양심선언」이나 제2의 안면도 집단민원을 지원하는 그런 정도 이상의 고상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